

## 책머리에

2016~2017년 촛불을 들며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의 문제의식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 경험이 지난 1987년의 귀결처럼 지체된 민주주의나 사회변혁 없는 정치 개혁에 머무르지 않도록 또 다른 운동의 시작으로, 보다 근본적인 변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오랫동안 상실되었던 정치의 공간을 새롭게 만들고 그 곳에서 살아갈 인간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은 ‘촛불 이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2016~2017년 촛불에서 볼 수 있었던 주체의 호명과 촛불 이후를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가 아니다. 촛불 1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었던 지난 2017년 10월 28일 촛불집회에서 보였던 다음과 같은 세 방향의 행진은 이를 잘 드러내준다. 애초에 퇴진행동기록기념위는 집회 이후 청와대 행진 등 도심 행진을 예정해 놓고 있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청와대 행진에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에 항의할 일이 없는데 왜 청와대를 가느냐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퇴진행동기록기념위가 주최하는 행사에 청와대 행진은 빠졌고, 촛불의 일부는 적폐의 근원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에 있다며 국회로 장

소를 옮겨 촛불을 진행했다. 다른 한편으로 공식 행사와 달리 도심 곳곳에서 진행된 사전 행사에서는 사드배치철회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집회가 진행되었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주최하는 청와대 행진도 5000여 명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촛불은 크게 세 방향으로 분화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촛불의 시작으로 보는가 또한 촛불항쟁의 주체와 의미에 대한 상이한 견해를 함축한다. 지난 촛불항쟁의 동력과 의미가 한편으로는 조직으로 묶어내기 힘든 자유로운 시민들의 자발적이고도 산발적인 다양성에서 찾아지기도 하며, 반면 결코 사회적 생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조직화된 투쟁과 연대가 촛불시위를 통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탄핵 국면으로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끌어가는 주력이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촛불항쟁의 시작은 2016년이 아니라 2015년 11월 15일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민중총궐기 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쌀값 폭락에 항의하며 이에 참여하기 위해 상경했던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이후 2016년 9월 25일 사망에 이르고 이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과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부검영장 만료일인 10월 25일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한 달 동안 지켜냈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운동이 최순실의 테블릿 PC보도와 박근혜 개헌 선언과 긴밀히 관련을 맺으며 10월 29일의 촛불시위로 상승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2016~2017년의 명칭이 ‘촛불항쟁’과 ‘촛불혁명’으로 상이하게 호명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 각 부문에 구축된 신자유주의적 질서와 그로 인해 개개인의 내면으로 일상화된 규율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대해 저항이 확산돼야 한다고 바라본다면, 촛불항쟁은 아직 혁명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촛불 이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최저임금 인상 등—그 마저도 불완전하게 되었지만—소득 인상을 통해 상층 노동자를 중간층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빈민과 하층 노동자, 특히 농민은 배제되어 있다고 그 한계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촛불항쟁은 혁명이라고 부르기에는 과도적 지배가 여전한 미완의 것이다.

이렇듯, 지금 우리 사회는 촛불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민주주의의 방향과 조건에 대해 논쟁하고 협의하며 가는 길 위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힘이 중간층의 확대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시민과 노동자·농민의 계급동맹에 놓여 있는지를 비롯하여 누가 시민으로 혹은 민중으로 스스로를 호명하고 모일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자유로운 개인들의 참여와 공감을 중시하는 다원적 자유주의의 경향, 공정으로서의 정의나 절차의 공공성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는 공화주의적 경향, 계급동맹에서 사회변혁의 핵심적 조건을 찾지만 그 속에서도 정부를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 시민주의적 경향과 민중민주주의의 경향이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촛불 이후’ 우리 사회의 여러 민주주의 운동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이한 방향은 때로는 전선을 만들며 갈등하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커다란 길 위에서 좀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발전해가는 도정에 놓여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일 그 길이, 자신의 운동 방향이 또 다른 주체를 대상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이 설정한 운동의 목표가 또 다른 독단이나 권력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걷는 길이 된다면, 촛불 이후의 여러 운동들

은 서로 연대의 지점을 찾아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이번 호에는 전체 투고 논문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5편의 논문을 실게 되었다. 좋은 글을 내주신 모든 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민주주의라는 주제에 기꺼이 심사를 맡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특집에서는 우리 사회에 표상된 여성의 이데올로기와 역할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두 편의 논문을 실었으며, 일반 논문으로 한미관계를 통해서 본 부마민주항쟁의 정치사회학, 전후 일본의 민중사 연구에 나타난 인민의 이미지, 히로시마현 조선인피폭자 협의회 결성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다룬 세 편의 논문을 실었다.

먼저, 특집 〈여성과 민주주의〉에서 김영정은 서울시에 위치한 3개 마을 공동체에서 활동한 여성 참여자들의 심층면접 사례 분석을 통해 마을과 여성의 관계를 검토하고 여성의 마을활동을 재의미화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처음에는 개인의 차원에서 아이의 돌봄을 위해 시작했던 여성참여자들의 활동이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인해 주제의식과 영역을 확장하며 공공성을 확보하게 되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여성들은 그 활동에 걸맞은 보상이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동원의 대상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그 동안 민주주의 운동의 일반론에서 해석되어왔던 마을공동체 운동이나 지역 자치운동을 실제 그 활동에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의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의미 있는 글이다. 만일 마을공동체 운동이나 사업에서 여성이 지역자치의 주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단순히 동원의 대상으로 규정된다면, 돌봄의 주체라는 여성의 역할은 기존의 성별 분업을 고착화시키고 가족 내부에서 가졌던

여성의 불평등한 위치가 마을공동체라는 지역사회로 확장될 위험이 있다는 이 논문의 우려는 마을공동체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자치와 민주주의 운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성찰해야 할 지점임을 드러내준다. 그 대안으로 이 논문은 지역사회운동에서 돌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재평가하고 그러한 관점 속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조직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진선은 1964년에서 1973년대까지 대중잡지에 나타난 베트남전쟁에 대한 기억과 표상을 통해 당대 한국 사회를 바라본다. 당대의 대중매체를 통해 베트남전쟁에 대한 기억은 여성성과 남성성을 이분법적인 표상으로 재생산하였으며 바로 그것이 우리 안의 식민지를 만들어내고 베트남 파병을 지속 가능하게 했던 이데올로기였다고 이 논문은 해석하고 있다. 베트남 여성의 '구원자'와 '보호자'로서 한국군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한국 여성을 '모성애'와 '현모양처' 담론 속에 위치 지움으로써 베트남 파병을 정당화하고 당대 한국 사회의 군사주의, 개발주의, 반공주의를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한 사회의 지배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기억 투쟁과 이데올로기 투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재고하게 해주며, 우리 안에 구축된 가치체계와 일상적 실천을 파고드는 관념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성을 바라보는 굴절된 '젠더'와 '인종'적 시각이 당대의 왜곡된 욕망과 차별을 만들어냄으로써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를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로 역할했다는 이 논문의 논지는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여성 혐오에 대한 담론과 표상들 또한 단순히 페미니즘의 관점을 넘어 우리 사회의 특정한 지배구조를 합리화하

고 강화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바라보게 해준다.

일반 논문의 경우, 지주형은 1979년 부마항쟁을 미국의 이중적인 대한 정책이라는 맥락 속에서 생겨난 국내 두 정치세력 간의 강경노선과 그 저항 운동으로 바라본다. 1979년 박정희 정권과 김영삼을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 간의 정면충돌 이면에는, 한편으로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중단하고 박정희 정권을 승인하면서도 다른 한편, 인권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반대 세력이 강경 노선을 취하는 데 기여한 미국의 이중적인 정책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그간 부마항쟁과 유신정권의 붕괴를 1979년 악화된 한미관계에서 설명해오거나 혹은 그 반대로 해석해오던 기존의 시각을 넘어서려는 글이다. 부마항쟁을 미국의 이중적인 대한 정책이 야기한 양면적 효과로 고찰함으로써, 이 논문은 YH사건에서 부마항쟁, 유신정권의 붕괴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사태가 단순히 당시 미국의 지배적 국제질서에서 야기된 결과가 아니라 그 양면적 배경 속에서 전개된 국내의 정치적 투쟁과 저항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영진은 1960년대 일본의 민중사 연구들이 패전 이후 새로운 국가 건설의 신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마치 메이지 초기 국가 건설자들이 국민통합을 위해 그러했듯, 100년도 더 지난 과거로부터 하층 민중들의 언어, 몸짓, 얼굴을 생생하게 복원함으로써 당대 인민들의 생생한 이미지를 포착하고자 했던 바를 고찰한다. 근대 일본 민중들의 정신사를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추적하는 이로카와, 야스마루, 오에 겐자부로의 작업들을 통해, 이 논문은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복원하는 것이 아

나라 당대의 기억과 고통을 전유하고 현재의 의미 속에 놓음으로써 그 이후를 추구하는 작업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민주주의를 한 사회에 감정과 기억의 집합을 구성하는 문학과 문화, 이데올로기의 폭넓은 차원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글이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앞에 놓인 민주주의의 과제는 우리 사회가 어떠한 저항의 인간상을 상상하고 공감하며 만들어내는가로 제안된다. 국가, 정치, 민주주의란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조각난 과거를 일깨워 구축하는 일’, 혹은 ‘섬광처럼 스치는 어떤 기억을 붙잡는 일’, 그리하여 상상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양동숙은 1975년 재일조선인 최초의 원폭 피해자 운동단체로 조직된 ‘조선인피폭자협의회’의 결성과 활동을 일본의 원수폭 금지운동과 관련시켜 검토한다. 이 논문은 당시의 명칭인 피폭자의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이것을 직접 원폭 피해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를 입은 유족과 그 후세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조피협’의 활동이 냉전 체제 하의 반핵 평화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역사적 맥락을 추적하고 있다. 조선인 피폭자들은 일본의 원수폭 금지운동에서도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지만, 1970년대를 거치며 더 열악해진 조선인의 상황과 일본의 강한 배외주의로 인해 협의회를 결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조피협’의 활동과 난제는 전후 일본의 법적 제약이나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대한 굴절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이 논문은 바로 그러한 난제들로 인하여 협의회가 활동이 피폭자 구제뿐 아니라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쟁 책임을 묻고 핵무기 폐기라는 평화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바라보며,

일본의 강한 배외주의로 인해 오히려 세계시민으로서의 민주적 정체성과 연대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듯하다. 평화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 세월호 사태를 비롯하여 우리가 받았던 일본 식민 지배의 기억이나 우리가 참여했던 베트남 전쟁에 이르기까지, 한 사회가 구성원들이 입은 상처와 피해를,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입힌 상처와 받은 상처를 어떻게 드러내고 제기해야 하는가에서부터 평화는 시작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한편, 서평으로는 2012년 출간된 이문 버틀러의 『나쁜 민주주의』가 실렸다. 서평자인 이관후는 이 책이 좋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과 당위가 아니라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하는 정치인과 유권자들의 정치 공간에 포커스를 맞춘 저술인데, 정치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현실주의자들의 관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 책의 부제이기도 한 공공선택학의 관점에 따르면, 대표의 위기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이기적 행태에서 연유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을 추구하는 개별 행위자들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빚어내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이다. 서평자는 특히 촛불 이후 우리 눈앞에 산적한 정치 현안들을 실제적인 정치적 결정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대표제 민주주의와 관료 행정 시스템이라는 정치 공간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이 요청된다고 이 책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번 호 회고록에는 필자 김정남이 겪은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회고가 실렸다. 영화 〈1987〉이 상영되고 6월 항쟁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려는 지금, 필자는 자



신의 경험을 6월 항쟁의 도화선을 촉발시킨 영웅적 미담으로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여러 사람들의 노심초사와 배려와 견딜과 용기가 모여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준다. 그렇게 한 시대의 노(老)운동가는 우리에게 서로를 믿고 가라고 이른다. 그리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마치 우연의 우연처럼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사실은 우연이 아님을, 진실은 자신의 힘으로 그 실체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 힘을 내라고.

이번 호를 기점으로 편집위원회가 대폭 재구성된다. 『기억과 전망』이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전망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 관점과 해석의 지평을 넓히는 좋은 글들이 실릴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동안 편집위원회를 이끌어주셨던 정근식 편집위원장과 모든 편집위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편집위원 모두 지난 수 년간 어려웠던 시절을 겪어내며 민주주의라는 주제의식과 논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했던 시간이었다. 2016~2017년 촛불을 들며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되찾았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촛불이 신화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해 새롭게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이제까지 그래왔듯 『기억과 전망』이 늘 그 논의 한 가운데에 있기를 기원한다. 우리가 겪었던 촛불이 찬미와 성찬의 제단이 아니라 두려움의 시선 속에 계속 타오르기를 바라며. ~~다~~

2018년 6월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주원 씀